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58호
2020.5.25

정책동향

- 여성 건설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건설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시장동향

- 건설 관련 해외 주요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산업정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워크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 디지털 뉴딜과 전통 뉴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여성 건설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경영상태 우대 공사 상향 및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의 업종 간 차별 없애야 -

■ 종합건설업 중 여성기업은 1,671개사로 13.9% 차지¹⁾

- 종합건설업 중 여성기업은 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에 23.8%, 지방에 76.2% 분포하고 있음. 특히, 광역시보다는 기타 지방에서 여성 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서울(130개사)·인천(40개사)·경기(228개사)에 총 398개사, 23.8%가 분포해 있으며, 광역시(세종시 포함)에 19.0%(318개사), 그리고 기타 지방에 57.2%(955개사)가 분포함.
 - 시도별 전체 종합건설업체와 비교한 여성기업의 비중은 강원도가 23.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북(21.5%)임. 시(市) 중에서는 대전이 16.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14.1%)로 나타남.

■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약 35억원에 불과

- 여성 종합건설기업들 중 1,227개사인 73.4%가 조달청 등급별 공사 배정 규모를 적용하는 7등급에 속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임.
 - 1등급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2등급 업체 1개사(0.1%), 3등급 업체 5개사(0.3%), 4등급 업체 18개사(1.1%), 5등급 업체 66개사(3.9%), 6등급 업체 130개사(7.8%), 7등급 업체 224개사(13.4%)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종합건설업체 업체당 평균 기성액의 23% 수준에 불과한 35억원으로 대다수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경영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이 공공공사 수주에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상태에 비해 수익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전체 기성액에서 공공공사 기성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무(全無)한 여성 종합건설기업이 27.0%나 되며, 53.6%의 업체들은 공공공사 비중이 전체 기성액의 50% 미만이었음.
 -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경우 종합건설업 전체 평균, 중소 종합건설업 평균 및 여성기업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채비율은 양호한 반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은 현저히 낮음.

1) 이하 본 원고에 제시된 여성 종합건설기업 현황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표 1>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재무 상황(2017)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 수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종합건설업 전체 평균	12,872	46.2	116.2	5.7	5.1
중소 종합건설기업 평균	9,678	57.9	72.6	5.3	4.2
여성 종합건설기업 평균	1,671	77.1	49.7	-6.7	-1.9
여성기업 전체 평균(2018)	42,803 ^주	35.2	184.1	n.a.	4.6

주 : 1) 각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2) 여성기업 수는 동 실태조사에 사용된 표본 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9.12),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 여성 건설기업의 활약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되어야

- 첫째,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 부여 대상 공사를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여야 함.
 - 2018년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²⁾ 10억원 미만 공공공사가 당해 연도 전체 공공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13.3%임. 이 중 2억원 미만 공사를 제외할 경우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 공공공사의 10%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 이를 당해 연도 총계약액과 비교해보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총계약액의 3.3% 수준임. 종합건설업 전체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9%임을 감안할 때 3.3%는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으로 동 제도가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수주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시사함.
- 둘째,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행공사 구매목표 비율’을 현재의 3%에서 물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게 5%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이 물품과 용역은 5%인 반면, 공사는 3%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비중이 낮은 이유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물품, 용역,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 조달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음.
-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 건설기업들에게 적합한 정보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 협·단체 등 건설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제도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여성기업 지원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여성 건설기업들의 경우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활용 실적도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음.

김민형 선임연구위원(mhkim@cerik.re.kr)

2)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공사는 3억원 이상이나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조사」의 공사 규모별 구분 구간이 2억원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정리함.

건설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 구축

- 교육훈련생의 지속적 관리 시급, 과제 1순위는 ‘직업으로서 비전 제시’ -

4차 고용개선 기본계획, 청년층 인력 성장 경로 구축 지원 강화

- 최근 정부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내국인 건설 일자리 확대의 한 방안으로 청년층 건설인력의 성장 경로 구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정부는 건설 특성화고(전국 104개교) 대상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19년 15개교에서 2024년 50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2020년부터).
- 사업성과(2018년) : 취업률(70.6% → 76.8%) 및 3개월 고용유지율(20.6% → 40.6%) 상승
- * 목표(개교) : (2020년) 20개 → (2021년) 25개 → (2022년) 30개 → (2023년) 40개 → (2024년) 50개

건설 분야 도제식 훈련을 위해 훈련생 관리, 참여 기업 확대 등이 중요

- 건설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숙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 도제식 훈련 활성화가 필요함.³⁾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제식 훈련사업의 애로 사항 및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표 1>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향후 도제식 훈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참여 업체와 학교, 훈련생 모두 ‘교육훈련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참여 기업의 확대’, ‘현장 실습 시간의 확대’를 주요 방안으로 꼽음.
- 훈련생의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으로서의 명확한 비전 제시’가 52.8%로 1순위,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 42.7%로 2순위, ‘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이 37.1%로 3순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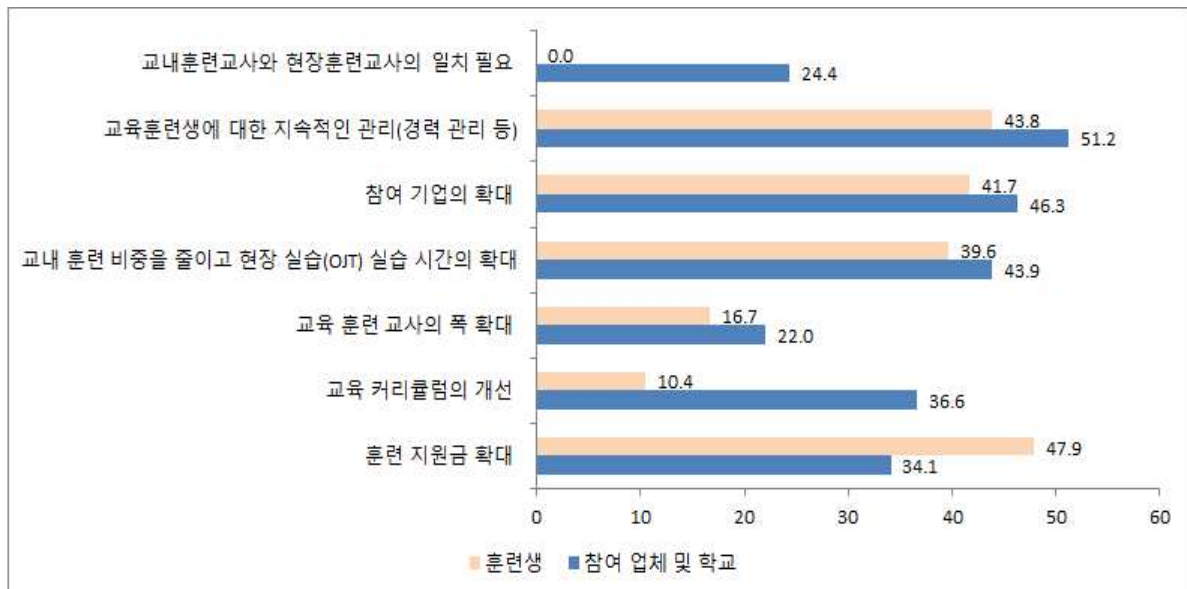
도제식 훈련,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고민해야

- 종합해보면, 훈련생에게 직업으로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생의 경력 관리와 체계적인 현장 교육, 안정적인 고용 여건 조성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3) 이와 관련된 내용은 건설동향브리핑 751호,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중요성 강조되나 아직 미흡’을 참조.

<표 1> 향후 도제식 훈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⁴⁾

(단위 : %)



주 :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전체의 합이 100%가 될 수 없음.

- 일례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상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구직자들이 경력 계획 수립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평생 관리할 수 있도록 'Job 카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학교 졸업 → 구직 → 재직(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 중년~은퇴'에 이르기까지 경력 관리가 평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도 훈련생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훈련생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도입되는 건설기능 인등급제의 통합 DB 모델 구축과 연계되어 경력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묵지(Tacit knowledge, 暗黙知) 형태 기술 전수가 명시지(Explicit knowledge, 明示知)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함.
- 현재 건설업의 도제식 교육은 시작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으로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4) 본 설문조사는 도제식 지원 사업의 애로 사항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훈련생, 전문건설업체, 고등학교 교사, 훈련 교사 등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됨. 총 91명이 설문에 참석하였으며, 이 중 훈련생이 50명(54.9%), 전문건설업체 종사자가 19명(20.9%), 고등학교 교사가 10명(11.0%), 훈련 교사가 5명(5.5%), 학계가 7명(7.7%)임.

건설 관련 해외 주요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 신속한 '피해 현황 진단'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정책 및 방안 마련' 중요 -

■ 주기적·반복적 웨비나(Webinar)와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아이디어 도출

- 지난 2019년 12월 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최초로 확인된 이후, 국내에도 지난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는 전(全) 세계적으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음.
- 특히, 건설 관련 글로벌 주요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지원함은 물론,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웨비나(Webinar : 온라인 세미나) 또는 설문조사를 주기적·반복적으로 실시하여 그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제표준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대표적 기관인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이하 FIDIC)은 웨비나와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건설업계에 제공하고 있음.
 - FIDIC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종식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표 1>의 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웨비나를 진행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임.
 - 또한, FIDIC의 유럽지역 위원회인 유럽엔지니어링연맹(FIDIC in Europe, EFCA)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내 주요국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국가별 조치 현황을 파악한 바 있음.⁵⁾

<표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FIDIC의 웨비나 주제 및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주제 및 주요 내용
(주제 1) 코로나19와 프로젝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 및 현장운영에 요구되는 계약, 조달, 현장 활동, 불가항력, 분쟁, 인력 등의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주제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활동과 대응 방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관계, 재무상태, 유동성 확보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한 방안과 산업 차원의 위기대응 계획 등
(주제 3) 코로나19 종식 이후 변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제 4) 코로나19 종식 이후 미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행병에 대한 산업 탄력성 확보 전략 등

자료 : FIDIC 홈페이지(<https://fidic.org/COVID19Webinars>).

5) 유럽 엔지니어링연맹(EFCA) 홈페이지(<https://www.efcanet.org/news>), 검색일 : 2020. 5. 18.

- 한편, 미국의 종합건설협회(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of America, 이하 AGC)⁶⁾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주간(2020. 3. 17~2020. 4. 9) 4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수행함.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내 건설사업의 중단 및 연기, 납품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표적으로, 계약 및 운영 중인 건설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차 조사 결과 45%에서 4차 조사시에는 6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납품 지연 비율 또한 22%(1차 조사)에서 42%(4차 조사)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AGC는 이러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건설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을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48%)’, ‘대규모 인프라 투자(41%)’, ‘프로젝트 지연 또는 섯다운시 고용주 보상을 위한 자금 지원(33%)’ 순으로 나타남.

<표 2> 코로나19 현황 파악을 위한 AGC의 주요 설문 문항 및 조사 결과(4차)

설문 문항		응답 결과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진행 중 프로젝트 중지 또는 향후 30일 이내에 시작 예정인 프로젝트의 취소 명령을 받아본 경험		27%
현재 수행 중이거나 예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주의 작업 중단 또는 취소 경험		53%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중단 발생		65%
공급업체의 납품지연 또는 취소 통지		42%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또는 확장공사 수행		18%
프로젝트 지연 및 취소, 긴급 유급휴가, 신규 사업 발생 등으로 인한 기업의 직원 수 변경		감소 40%, 증가 4%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신청		승인 10%, 대기 54%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48%
	대규모 인프라 투자	41%
	고용주 보상을 위한 직접 자금 지원	33%

자료 : 미국 종합건설협회(AGC) 홈페이지(<https://www.agc.org/coronavirus>).

- 이러한 건설 관련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설문조사, 웨비나 등의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건설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현장 운영시 필요한 실질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구체적 대응 정책 건의, 계약자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

- 건설 관련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건설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응책 또는 요청 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건설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음.

6) 미국 종합건설협회(AGC)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agc.org/coronavirus>)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 정부 및 건설업계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요약·정리함.

- 일례로, AGC는 건설기업들의 정책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건설기업 지원 정책(급여 지원, 세금 공제 및 연기 등)과 더불어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손실 지원,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요청 및 건의한 바 있음.
 - 미국 정부는 「CARES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해 ‘근로자 인건비 및 간접비 지급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유급휴가 시행 고용주에 대한 환급가능 세액 공제’, ‘고용주 급여세 납부 연기’ 등 건설기업을 위한 경제·금융 지원 방안을 운영 중임.
 - 이러한 정부 정책과 더불어 AGC는 건설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기업 보호를 위해 ‘자연·취소된 사업 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에 있어서는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대상기업 조건 완화 등을 건의함.
- AGC를 비롯해 약 40여 개의 건설 유관단체가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ConsensusDocs®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자재·장비 수급 지연, 발주자 분쟁 등의 상황으로부터 계약자(원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표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계약자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내용
계약 조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의 유무, 전염병의 불가항력 사유 포함 여부 검토
공사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자 통보 및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 지연 및 추가 공사비 발생 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히 통보(서면 등) • 계약자의 계약 준수 여부 입증(기록 및 문서화 등)
발주자 사업 정지 및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에 의한 사업 정지 및 종료시 보상 조항 확인
공사비 및 공기 영향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 연장 및 공사비용 증가에 대한 근거의 문서화
계약 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M 분석 등을 통해 공기 연장 기간 예측 및 분석 지원 • 정량화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근거 제공
전염병 관련 계약사항 부재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내 전염병 조항 부재시, 관습법에 따른 계약자의 권리 요구 가능, 다만 해당 경우 발주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며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 필요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 여부 확인 • 보험 약관에 제시되어 있는 통지 의무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손실 추정을 위해 입증 자료 문서화
원·하도급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절차 일원화
문제 상황 사전인지 및 공동 대응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공급 등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사전 평가 및 인지 • 하도급자-자재·장비 공급업체 등과 함께 대응계획 수립 및 프로토콜 개발
사무실 및 현장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청(OSHA), 질병관리본부(CSHA) 등 관계기관의 지침 및 권고 사항을 준수
유사 상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코로나 19와 유사한 전염병 발생시, 계약상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자료 : ConsensusDOCS 홈페이지(<https://www.consensusdocs.org>).

- 해당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불가항력 관련 계약조건 검토’, ‘공사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자 통보 및 계약자 입증’, ‘발주자 지원’, ‘원·하도급자 간 협력’, ‘사업참여자 공동 대응계획 수립’, ‘사무실 및 현장 안전관리’ 등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 자재가격의 에스컬레이션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건설 관련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1단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 아이디어 도출’, ‘(2단계) 기업 대응 방안 제시 및 정부에 대한 대응 정책 건의’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단계별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단계인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는 그 피해 현황과 대응 아이디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앞서 살펴본 웨비나나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기간이 길고 사업 참여자가 다수이기에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정략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실제 피해가 나타나기 전 웨비나나 설문조사를 통한 빠른 조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또한, 전염병 발생시에는 상황상 대면 접촉을 통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웨비나나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더구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 전 또는 피해가 발생 중이나 그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 예상 피해 정도나 대응 방안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유효한 대응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2단계인 ‘기업 대응 방안 제시 및 정부에 대한 대응 정책 건의’ 과정에서는 1단계의 조사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정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함.
 -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 발생의 경우 건설업계뿐 아니라 전 산업계의 피해가 명확해지기에 정부 또한 빠르게 각종 대응 정책을 제시함. 해당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여 산업계의 빠른 적용을 유도하고, 건설업계와 기업에 필요한 정책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협·단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건의 및 요청이 필수적임.
 - 또한, 건설 관련 협·단체는 정부의 대응 정책을 고려한 건설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언제든 발생 가능성을 명심하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유사 상황 발생시 ‘정부-산업계-기업’의 유기적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정광복(부연구위원 · kbjeong7@cerik.re.kr)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워크

- 코로나19는 업무 방식을 스마트워크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 -

■ 코로나19,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

-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경제·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그중 하나는 비대면(언택트, untact) 생활 방식임.
 -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초·중·고 전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기업 근무자들은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서비스를 경험함.
 - 코로나19 종식이 더디어지며 비대면 방식은 소비, 산업, 의료, 수업 등 사회 전반의 트렌드가 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4. 14)에서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힘.
- 비대면 생활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하는 방식, 고용 형태, 학습 방식 등의 변화를 앞당기는 방아쇠가 되었음.
 - 과거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기존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원격 협업 등을 강제하며, 기존 업무 방식을 스마트워크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함.

■ 스마트워크 현황

- 우리나라는 일찍이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을 발간(2011년)하는 등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지원해 왔음.
 - 해당 가이드북은 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스마트워크로 정의하고, 현장/이동 근무, 재택근무, 센터근무 방식과 원격 협업 및 유연근무제 등의 운영 방법을 제시함.
- 하지만 pwc의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⁷⁾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 도입률은 25% 내

7) pwc(2020. 4),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 : 디지털 경제 가속화」, Samil Issue Report; 잡코리아(2018) 및 고용노동부(2016) 자료 인용.

외로 해외 선진국의 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기업 형태별 스마트워크 도입률은 대기업 24%, 중소기업 13%, 공기업 31%, 외국계 기업 28%로 나타남.
- 또한, 재택근무의 경우 미국 38%, 일본 12%로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의 재택근무 적용률은 4%에 불과했음.

-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기업들은 스마트워크 도입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스마트워크의 도입 범위와 대상 선정, 업무 분석, 규정 마련 등 관련 체계 정비를 시작함.

■ 건설산업의 변화 동향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스마트워크 방식으로의 적응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이동 제한,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진 미국에서는 재택근무 및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을 통한 업무가 증가하였으며, 설계/엔지니어링사의 경우 웹 또는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기존 업무에 사용해 왔기에 원격 업무에 따르는 문제를 거의 겪지 않음.⁸⁾
- 이와 달리, 시공 분야의 경우는 필수적인 현장 업무가 동반되어 스마트워크를 위한 기반이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필요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음.
 - 현장 업무가 중심이 되는 시공 업무 특성상 원격근무 등 비대면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로 인한 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뉴노멀에서의 일하는 방식 만들기

-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상화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경험한 스마트워크 방식도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기업의 업무체계 재조정이 필요함.
- 원격근무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 감소, 생산성 향상, 직원 건강 증진, 워라밸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협업 저하의 단점도 존재함.⁹⁾ 따라서 도입을 위한 업무 분석, 업무 계획 등이 진행되어야 함.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8) ENR(2020. 4. 29), 「2020 Top 500 Design Firms : Will COVID-19 Change Design?」.

9) 삼정KPMG(2020. 5), 「코로나19로 가속화될 디지털 워크 및 기업 대응 방안」.

■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주관기관	주요 내용
5.13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회의에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 참여
5.15	기획재정부	• 민자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주택도시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5.21	국토교통부	• 전담전문가 파견 컨설팅 평가 회의에 손태홍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 참여

■ 주요 발간물 및 활동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스페셜 이슈 포커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과 수요의 동시 위축이 발생하면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국가별로 이뤄지고 있는 입국 제한 및 이동 금지 등의 조치로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해외건설도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 세계 각국에 진출해 건설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의 다수 건설기업은 입국 제한과 이동 중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현장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본 연구는 현재 해외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해외사례 분석을 종합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였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8%는 코로나19 확산이 수행 중인 해외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함.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착공 예정인 사업과 향후 신규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제한 등 국가 봉쇄로 인한 인력 및 자재 등의 조달 체계 혼란, 사업 현장의 축소 운영, 발주국의 공사 중지 및 축소 운영 등의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약 조건상에 불가항력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발주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공기 연장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계약변경 협의시 발주처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사업 영향 완화를 위해 '사업 수행 필수 인력의 입국 제한조치 완화 및 해제 노력의 지속(35%)'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발생시 법률 자문 지원(27%),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18%), 수주 전략의 목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방역용품 제공(15%), 국내 업체의 입찰 배제 등 발주처 불공정 행위 해소(5%) 등을 언급함. •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의 대응 과제로는 ① 산업별 팬데믹 대응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시행, ② 입국 제한 등의 조치 완화를 위한 외교적 대응의 지속 및 강화, ③ 클레임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 ④ 해외사업 수행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공유, ⑤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시장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이 포함됨.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과제로는 ① 팬데믹 대응 조직의 구축과 운영, ② 전염병 등을 포함하는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 ③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가 포함됨.

디지털 뉴딜과 전통 뉴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더해 그린 뉴딜이 포함될 것이며, 조만간 세부과제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형 뉴딜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달리 대규모 SOC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디지털 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전통적 경기부양책으로 오랫동안 활용돼 온 대규모 신규 SOC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적다.

디지털 뉴딜은 중요하다. 하지만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도 중요하다. 왜 이 시점에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항공·여행·숙박업계를 비롯한 전통산업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다. 반면 온라인 기업이나 디지털 산업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수혜자다. 한국형 뉴딜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디지털 뉴딜보다 전통 뉴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산업은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갈수록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형 뉴딜은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전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래 IT나 디지털 부문의 투자는 급속하게 늘었지만 도로·철도·공항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는 게을리했다. 전통 인프라 투자는 주로 정부 몫으로 남겨졌고, 민간투자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되다 보니 디지털 부문과 인프라 부문 간의 격차가 심화됐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낙후된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오랫동안 미뤄 온 인프라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도 디지털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노후 인프라 시설만 디지털화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새로 만드는 인프라는 모두가 스마트 인프라로 건설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은 뉴딜이란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1930년대의 미국 뉴딜만 해도 테네시강 댐공사와 같은 SOC 건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해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이 '산업부흥법'이었다. 이 법에는 산업부문마다 공정 경쟁 규약을 작성하게 해서 지나친 경쟁을 억제하고, 생산제한이나 가격협정을 인정하면서 적절한 이윤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건설 산업에도 이 같은 법이 필요하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에서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형 뉴딜'에 붙어 있는 '한국형'이란 수식어도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과거 미국의 뉴딜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의미했다면, 한국형 뉴딜은 거꾸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중시해야 한다. 재정을 동원한 투자 확대는 '마중물'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민간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2020.5.20>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